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국 최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도, 20년간 총 7680억원 주민지원사업 세수 확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수익 지역사회와 공유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전국 최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았다.

전북도는 이번 지정으로 향후 20년간 총 7,680억원(연간 384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도는 15일 2.4GW 규모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안전 심의를 통과하며, 전국 최초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40MW를 초과하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구역이다.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가능하고 지자체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익을 지역 사회와 공유해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도는 정부 목표인 2030년 세계 해상풍력 5대 강국 도약의 첫 걸음인 전

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전국 최초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2.4GW) 지정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심의, 4월 주민 설명회를 거쳐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했다.

이후, 10월 27일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평가가 통과됐으며, 마지막 관문인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2.4GW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총면적 448km²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받게 됐다.

이는 전국 최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한국형 해상풍력 사업의 롤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주민 수용성 확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광역지자체가 주도하는 협의체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지난 2019년 7월부터 구성·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민·관이 함께 모여

‘2.4GW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전격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에서는 수산업 공존, 지자체 주도형 사업에 따른 공급인증서(REC) 수익 활용방안 및 주민 이익공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해양환경문제, 입지 후보지역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됨으로써 해상풍력 발전량에 따라 20년간 총 7,680억원(연간 384억원)의 지자체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익이 지자체에 지급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익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주변 지역 주민 소득증대사업, 어업공동체 육성 및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 해상풍력단지 주변 생활환경 개선사업, 기반시설 확충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지역 발전사업에 활용되게 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앞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고, 해상풍력 연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전북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확산세 막지 못하면 더 큰 피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따라 전주시, 비상 확대 간부회의 김 시장, 방역패스 점검 사적모임 자제 등 주문



김승수 전주시장은 15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35개 동 동장들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집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비상 확대 간부회의를 열었다.

전주시가 대신민 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35개 동 동장들을 소집해 코로나19 긴급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5일 시청 강당에서 35개 동 동장들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집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비상 확대 간부회의를 열었다.

전날 대신민 담화문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 동참을 호소한 김승수 시장은 이날 시민들의 집중에 있는 동 주민센터의 방역대책 대응을 주문하기 위해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식당, 카페, PC방, 노래방 등 1만5,000여 개소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점검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수기명부 단복사용 관련 계도기간이 19일까지 연장되고 20일부터 본격 적용된다는 등의 방역수칙 관련 내용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시는 위중증 환자 전담 병원을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 원광대병원 3개소에서 대자이병원까지 4개소로 확대하고 138개 병상을

수 있도록 하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물론 청년층의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 관계자와 자생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홍보에 주력해 달라고 했다.

김 시장은 이날 0시부터 별도 제시까지 1,700여 개의 공공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다중이 참여하는 대면행사도 전면 금지된다는 사항도 다시 한 번 공유했다.

전주시 직원들에게도 향후 2주간 사적모임과 타 시·군 이동을 자제하는 등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시는 위중증 환자 전담 병원을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 원광대병원 3개소에서 대자이병원까지 4개소로 확대하고 138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선별진료소의 경우에도 근무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시민들이 원활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재택치료전담반을 확대하고 응급 이송체계를 강화해 재택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불편함 없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벨타 바이러스보다 4배에서 최대 6배 이상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전주시 공직자 모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새마을지도자 정부포상·도지사 표창 수여식’ 15일 전북도청에서 2021 전북새마을지도자 정부포상 및 도지사 표창 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운데)와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 지방투자촉진 ‘우수’

전국 유일 7년 연속 선정... 기업 투자 촉진 노력 ‘인정’

전북도가 전국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을 가장 많이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 투자유치 노력으로, 전국적 인정을 받았다.

도는 2021년 산업부의 지방투자촉진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번 선정으로 전국 유일 7년 연속 우수지자체에 선정(2015~2021년)됐다.

이번 성과는 투자협약 체결기업에 지원되는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전국 최대 확보, 투자보조금 적기 지원 기업 애로사항 적극 해소 등 다방면의 투자 촉진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급 지원 규정에 따라 지방기업 신증설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등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45%~80%)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년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실적 지원기업 관리 수혜기업의 만족도 등을 평가해 지방투자촉진 우수 지자체를 선정(광역도 2, 광

역시 1)하고 있다.

도는 이번 선정에 따라 2022년도 국비 보조비율 5%를 상향 지원받게 됐다.

올해 전북도는 투자유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509억원을 확보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역별 지원 규모는 기업유치 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로 올해 비내륙 등 16개 기업에 655억원(국비 509, 도비 63, 시군비 83)의 보조금을 확보했다.

2021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전체 국비 지원 규모 1,947억원 가운데, 전북도가 509억원을 확보해 그 비중은 26.1%에 달한다.

도는 특히, 지방투자촉진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에 제공되는 국비 5% 상향 인센티브 지원으로, 지방비 절감에 크게 기여했다.

우수지자체 선정 다음 해에 제공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보조율 5% 상향 지원(지방비 5%↓)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비 201억원을 절감했고, 내년에도 52억원 이상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가금·종란 반입금지 시행 등 도,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강화

전북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발병 시·군의 가금, 종란 및 분뇨를 반입금지 조치를 15일부터 시행한다.

도는 최근 타 지자체 가금농장(3개 시도 8개 시·군의 12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의 원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차단을 위해 상시 운영돼 온 거점소독시설 14개소를 26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도내 오리농가 73호에 대해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사육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등의 11개 행정명령도 시행 중이다.

박태욱 도 동물방역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농장 안팎에 대한 기본적인 차단방역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모든 축산농가는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육 가족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 가족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 1588-4060)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